

정보공개, 참정권이 헤엄치는 바다

교육의창

윤영백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실행위원장



어떤 행정실장은 정보를 달라면 “그냥 믿어주세요” 했다. 칸막이 의식일 수도 있지만, 아랫사람과 정보를 겸상하기 꺼리는 권위의식 탓이라 느꼈다. 소통보다 위계가 중시될수록 정보는 비대칭적이다. 비대칭 정보는 불합리한 위계의 기반인 셈이다.

모임에서 회비를 어디에 썼는지 밝히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정보는 일상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모임 건강을 위해서 좋다. 만일 누군가 이런 정보를 묻는다면, 담당자를 믿지 못하냐고 노려볼 일 이긴 커녕 여러 가지로 고마운 일이다.

우선 어려움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태도여서 고맙다. 두 번째는 모임 구성원들에게 살림한 이의 수고를 알릴 기회를 준 것이니 고맙다. 세 번째는 앞으로도 투명하게 살림하도록 마음을 다잡게 하니 또 고맙다.

묻는 쪽에게도 중요하다. 우선, 자기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것 자체가 이미 기본적 권리이며, 기본권이 충족된 뒤라야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 즉, 그 모임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복돋는다.

나라가 건강하게 운영되는 일도 결국 같은 이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1996년 제정됐다. 실제 정보공개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제정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법을 만든 지 30년이 돼가고, 정보공개 3.0 등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구호는 버전을 높여가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정보를 주는 일에 인색하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빈껍데기 정보를 주는 일이 여전히 잦다. 그런 상황을 겪을 때면 ‘그냥 믿어달라’며 눈을 내리깔던 예전의 행정실장이 생각난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을 받았을 때, 방송국 인터뷰 요청이 있었다. 활동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 물었는데, 서슴없이 ‘돈’과 ‘정보’라고 답했다. 알지 못하면 참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는 참정권의 기반을 제공하는 일이다.

올해에만 우리 단체는 행정소송을 4건 제기했다. 모두 교육청에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수업 중 신입생 홍보에 동원된 현황, 사학 운영 평가결과, 허위 체험학습 신청을 유도한 후 학원 수업을 한 건에 대한 조사, 학교급식관리시스템 부조리 관련 감사결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교육청이 조사, 조치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점에서 공통적.

이걸 알아야 시민단체가 몸을 가눌 수 있는데, 시간을 끌다 안 주거나, 빈껍데기만 주면 난감하다. 정보는 음식과 같아서 갓 만들어졌을 때 가장 맛있는데, 기본 처리 기간, 연장, 공개 거부, 이의제기, 재심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식어서 정보의 유통기한이 끝나기도 한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는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정보를 주라고 만든 법이니까. 그런데, 피 청구기관이 단골로 돌려쓰는 비공개 근거들이 있다.

감사 처분 결과를 물어보면, 주로 개인정보라고 안 준다. 개인정보 지우고 달라면 나머지 정보를 조합해서 추리할 수 있다고 안 준다. 그렇다면 감사결과를 공시하는 것도 모순이다. 사학 관련,

업체 부조리가 걸린 사안에는 기업 경영에 관한 비밀이라면서 안 준다. 부조리가 왜 기업 비밀인가? 공공기관이 그걸 왜 감사하고? 시민단체의 권리 남용이라 우기거나 공무원 괴롭히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개를 거부하면 대다수는 정보를 포기한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헤엄칠 바다가 없으면 말라 죽게 되므로 소송으로 내몰린다. 문제제기당한 업체가 보복성 고소를 걸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정보가 절실하다.

소송은 쉽지 않다. 변호사비 아끼려면 소장도 직접 써야 하고, 접수할 때 돈도 많이 든다. 무려 4~50명 회원의 한 달 회비가 든다. 이겨야 돌려받을 수 있고, 지면 상대방 소송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비법물가로서 상대 변호사와 법정에서 맞서는 것도 버겁다.

다행히 우리 단체는 아직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져 본 일이 없다.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못 준다면 정보를 피청구인이 알뜰게 바로 보내는 경우도 꽤 있다. 우리가 대단해서일까? 어차피 줘야 할 정보였기 때문일까?

법원은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참정권이 뛰놀 바다가 일렁여야 민주주의가 생생할 수 있음을 지각한 덕분이라라.

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시민에게 줄 정보를 시민의 돈으로 막는 것도 심각한 부조리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이유를 살피기보다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기필코 찾아 뒤로 숨는 건 아닌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정보를 달라. 함께 책임질 테니. 수고했다고 칭찬할 테니.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니. 참정권이 힘차게 헤엄칠 수 있도록 물을 대달라.

기후변화 대응한 해남의 도전 응원한다

전국 최대 농업연구단지 조성

땅끝 해남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이다.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해남의 도전이 반갑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삼산면 평활리 일대 60ha에 정부와 전남도, 해남군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집적화가 추진된다. 이 곳에는 오는 2027년 건립될 예정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비롯해 전남도 과수연구소, 해남군이 투자한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와 청년농업인 스마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 해남군은 농업연구 중심의 1단지에 이어 삼산면 상가리 일원 약 21ha에 농업연구2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일상이 된 기후변화로 농업분야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기후변화는 온도 상승과 강수량 변화, 극단적 기후 사건이 늘어나며 농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해남에 들어설 농업연구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신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 적응성 연구를 통해 지역적·기후적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곳에서 만들어낸 정확한 연구결과가 정부와 자치단체에 효율적인 농업 정책을 위한 기반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와 유통, 생산 관련 시설 등 농업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

남은 과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당면한 현실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언제까지 지금의 농업이 계속될 수는 없다. 기후변화의 위기 앞에 우리나라 농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해남의 도전을 응원한다.

체류인구 연계한 소멸대응 필요하다

구례 1분기 45만명 방문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초미니 지자체인 구례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 체류인구는 44만 9206명으로, 등록 2만 4408명의 18.4배였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25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체류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체류인구는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실제 거주하는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현재 인구감소 지역의 전체 체류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는 약 490만 명,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약 4배,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로는 약 5배 많았다. 구례군은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구례는 1967년 12월 국립공원 제1호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수

유꽃축제·구례300리 벚꽃축제 등 월별 축제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유소년축구대회·구례 전국 여자 장사 씨름대회·아이언맨 코리아 등 체육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 추세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1개 동보다 적은 인구가 살지만 카페·식당 등이 넘쳐나고 체류인구는 10배가 훨씬 넘는 웬만한 소도시 수준인 30만~40만 명에 달한다.

체류인구는 일본의 관계인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전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정책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농어촌 인구 감소가 촉발한 지역소멸 위기는 해가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있다. 체류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의 간간힘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인구소멸지역은 정주여건 면에서 수도권 등을 따라갈 수 없다.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은 그 한계가 드러난 지 오래다. 결국 새로운 인구개념인 ‘체류인구’의 패턴을 고려한 연계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서석대

전남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이 주류시장에 활용되고 있다.

곡성 시항가 주조장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백세미를 사용한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 5년 동안 옹기에 숙성시켜 지난 1월 시장에 출시했다.

시항가 주조장이 사용한 백세미는 2024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5년 연속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유기농업협회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상을 받기도 했다.

쌀부터 막걸리, 냉동김밥 등을 K-푸드라고 칭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 누적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K-푸드 인기가 두드러지는 곳은 마·중·일본이었다. 미국은 고용 안정과 인플레이션 완화로 소비 심리가 양호해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소비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5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까지 수출대상국 1위를 차지했던 일본은 슈퍼 엔저와 고물가, 실질임금 하락 등의 타격으로 3위로 밀려났다.

수출액 증가율만 본다면 유럽과 오세아니아가 각각 30.2%·14.5%로 큰 폭 상승했고 중남미(12.1%), 중동(10.7%)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쌀가공식품이다. 냉동 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 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하는 쌀가공식품은 상반기 수출액 1억3690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41.4% 증가했다.

가공 밥은 글루텐 프리(gluten-free) 식품으로 수요가 높아지면서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 매장 입점이 확대됐고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 추세다. 전통적으로 쌀을 소비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액이 각각 60.7%·65.3%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먹거리에 이어 농식품 전·후방산업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반려동물사료, 동물용 의약품, 농약 등이다.

반려동물사료는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인 7980만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농식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 음식, 동물약품 등 주요 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수출 전략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본부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K-푸드가 지속 발굴·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조진용 기자